생명과학대학 장학금 논란 제도 허점 이용한 관행이 원인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국제】 지난 5일 생명과학대학(생대) 학생회 김다연(식품생명공학 2015) 회장이 대리수령을 통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학내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일부 구성원은 학생회장이란 명목으로 장학금을 수령 받는 점, 학생회장이 임의로 장학대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점, 장학금을 등록금 감면 형태가 아닌 개인 계좌로 수령한 점, 학생회장이 당 학기 휴학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대리수령한 점 등의 이유로 김 회장을 비난했다.

지난 4월 김 회장은 생대 학생회의 일원인 A씨를 통해 학생회 활동장학 명분의 '밝은사회장학' 장학금 430만 원을 대리수령했다. 장학금 대리수령은 과거 A씨와 학생회 활동을 함께 했던 최지희(한방재료공학 2015) 전 생대 학생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비록 학내 장학 규정에 '대리수령'을 통한 장학금 수혜가 금지된다고 명시돼있진 않지만 단순히 학생회에서 그 이전에 이뤄진 관행에 따라 임의로 대리수령을 진행한 점이 구성원의 반발을 빚어냈다. 당시 A씨는 총 43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받아 그 중 2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가졌고 그 중 410만 원이 김 회장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같은 부탁을 받자 A씨는 이를 거절하고 우리학교 방송국에 먼저 위 사실을 알렸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학생회 활동장학은 '밝은사회장학' 중 하나로 학생회 활동에 따른 보상형 장학이다. 밝은사회장학은 장학팀에서 선정하는 타 장학과 달리 단과대학마다 개별적인 기준으로 선정된다. 생대는 밝은사회장학 중 하나를 학생회 활동장학으로 규정해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집행부, 학과 대표를 수혜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학생회장은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는다.

하지만 여기서 장학 추천권이 학생회장에게 배당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학생회장이 장학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면 임의로 장학금을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은 "학생회장이 장학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책정된 액수에 맞춰 행정실에 장학 명단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회장은 "장학명단을 작성하기 위해선 장학대상자가 인적사항과 학적정보를 직접 기입하고 서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생대 장학위원회에서 장학명단이 교수진의 승인을 받으면 장학금 배분이 집행되는 시스템이다.

또 논란을 빚고 있는 장학금 개인 계좌 수령은 장학 신청시기가 늦었던 이유였다. 학생지원센터 장학팀에 따르면 고지서 발급 최소 1주 이전에 선발된 학생에 한해 등록금 감면 형태로 장학금 수혜가 이뤄진다. 하지만 학생회 활동은 고지서 발급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등록금 감면 형태의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하다. 장학팀 강덕현 과장은 "보통 학생회는 학기 중에 활동인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회장이 지난 학기에 휴학상태였던 것이 문제였다. 우리학교는 장학 지급 대상자를 재학생에 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대리수령은 이전부터 이어져온 관행으로 잘못된 절차인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장학팀 강 과장은 "이번 사례 이전에 대리수령 건과 관련해 본부 차원에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휴학생 수혜 여부 관련 규정에 지속적인 요청이 들어온다면 서울캠퍼스와 협의 하에 개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목소리를 낼 경우 또 다시 사실이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며 "학생회장이란 직책 하에 표명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했다"고 털어놨다.

생대 행정실은 집행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받은 학생회 활동장학에 대해 "학생자치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학생회와 개선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일관계 개선위해 도쿄대 방한 "친밀한 이웃국가 됐으면"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국제】 지난 18일 도쿄대학교(도쿄대)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방문해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 주제는 '한일 미래 세대가 꿈꾸는 아시아'로, 우리학교 일본어학과와 비교문화연구소가 주관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의 시선에서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관계 악화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자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한 일본어학과 손지연 학과장은 "더 이상 정치 차원에 기댈 수 없다"며 "시민의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라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특강은 도쿄대 국제교양학부 가와무라 하지메 교수가 진행했다. 하지메 교수는 학생들을 직접 인솔해 서대문형무소와 수요집회를 찾는 성찰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특강에서는 전쟁역사에서 파생된 일본문화,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역사 교육문제, 지향점 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 마냥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옳지 않다"며 "일본은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규제의 출발점인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아베 정부의 움직임에도 일본은 잔잔하다고 언급했다. 일본인은 도덕적 가치보다는 공동체를 과도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이 하지메 교수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돼 젊은 세대는 침략역사를 잘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일 학생들이 조를 이뤄 이야기를 나누는 교류행사가 열렸다. 행사에 참여한 오경현(일본어학 2015) 씨는 "최근 뉴스를 보며 일본에 편견이 있었는데 양심적인 일본인도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토야 사오리(도쿄대) 씨는 "지금 한국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앞으로는 친밀한 이웃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일본 교육과정을 통해선 올바른 역사를 알 수 없었다"며 "민간교류를 통해 알아간다면 정권과는 무관하게 아래-위로 여론이 형성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실천적 교류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교육자, 지식인이 연대해야 미래세대가 평화의 아시아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메 교수는 "서로의 사회와 역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교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면에서 이어짐

이에 더해 그 동안 합의를 디디게 만든 회의체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권오형 회장은 대학평의원회(대평의)와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에서 논의된 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규탄했다. 하지만 총장 후보 추천안 논의가 이뤄진 회의체의 대표성에 구성원 대표단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교수의회 강 의장은 "교수의회가 이제까지 대평의에서 총장 후보 추천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갈등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법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이 주관한 회의에 늘 참여했고, 이번 구성원 대표자 회의도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 2노조 장 위원장 역시 "법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학이 마련한 자리에서 의결된 사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1노조 한 위원장은 "명분상으로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차후에 있을 세부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총장 후보 선출 계획으로 1안이 협의됐다는 교수의회 소식지가 발행된 후 2안으로 구성원 의견이 수렴됐다는 박 대행의 통신문으로 구성원 혼란이 야기됐다. 박 대행은 이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지난 6일 열린 학내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1안의 직원과 동문 간 투표 반영률이 합의되지 않을 시 해당 안은 폐기된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합의가 된다면 1안과 2안 모두 법인 이사회에 상정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대행은 "당시 교수의회는 1안의 직원과 동문 간 투표 반영률 합의가 완료된다면 2안이 폐기된다고 판단했다"며 "1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최종적으로 1안이 결정됐다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행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총장 선임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선거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직원·학생 단체 간 투표 반영 비율 합의다. 제 1노조 한 위원장은 "2안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 규정이 정해졌으니 구성원 투표 반영률을 제외한 1안의 선거 방식을 그대로 반영할지 혹은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지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수의회 강 의장은 "2안을 채택할 시 직원과 학생 단체 투표 비율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은 다시 한 번 지연된다"고 말했다. 제 1노조 한 위원장은 "직원과 학생 단체 간 투표 비율 합의를 위해 제 1노조, 제 2노조,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의료원 노조) 간 협의를 끝낸 후 학생 단체와의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대학에서 직원단체 총추위 구성을 다음달 4일까지 완성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전까지 직원과 학생 단체 간 투표비율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제캠 총학 전 회장은 "직원과 학생 간 투표비율 합의는 우선 제 1노조, 제 2노조, 의료원 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면 시작해보려 한다"며 제 1노조 한 위원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 대행은 "직원과 학생 간 투표 비율 협의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난 6일 진행된 학내 구성원 대표자 간담회에서 신속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조속한 총장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박 대행은 "약 2주간의 총장 후보자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고 동시에 총추위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총장 후보 최종 추천은 오는 10월 25일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박 대행은 "대행 체제가 정확히 1년째가 되는 11월 21일에는 새로운 총장이 선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